

시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ESG, 기업 투명성의 기본 조건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오늘날 기업은 단순한 재무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회계정보가 얼마나 투명한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배구조가 얼마나 건전한지가 함께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ESG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회계제도전환법」이 제정되면서 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기 위해 마련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을 높이는 데 있다.

만약 기업이 매출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축소하고 손실을 숨긴다면, 이는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은 기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히 회계 처리 절차를 정리한 규정에 그치지 않는다. 더 본질적으로는 회계윤리(Accounting Ethics)를 기업 실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

는 제도적 기반이다. 회계윤리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직성, 객관성, 책임성,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강조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적절한 승인 절차, 업무분장, 점검 체계가 없다면 회계부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회계부정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때로는 경영진의 실적 압박이나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 요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담당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함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장치다.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기업은 회계 오류와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ESG 시대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과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ESG 정보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는 ESG 정보가 더 이상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시 정보가 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산업재해 발생률, 윤리경영 현황, 이사회 독립성 등을 공시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정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측정되었는지, 누가 검토했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정되는지에 대한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와 ESG는 모두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면, ESG 내부통제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이제 회계정보뿐 아니라 ESG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회계윤리는 기업 경영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ESG 성과를 과장하는 기업은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투자자 신뢰 상실, 법적 책임,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ESG 시대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기업이 윤리적 회계처리와 투명한 ESG 공시를 함께 실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社說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든다...오늘 선택의 날

6·3지방선거 본투표가 오전6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해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광주시내 투표소는 359곳, 전남은 785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유권자는 118만9천519명, 전남 155만8천206명이며, 이 중에서 34%가 사전투표를 마쳤다. 광주 동구와 전남 기초단체장 접전지에서 유독 높았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에서 보듯 터줏대감인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에 조국혁신·진보·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권과 무소속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형세다. 초반의 격차가 좁혀져 혼전을 거듭하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누구의 지지층이 더 결집했느냐, 비박표를 누가 더 얻느냐의 싸움이다. 전국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의미있는 선거다.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손에 넣어 민주당이 국정 장악력을 더 공고히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초대 통합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김광만 후보가 전역을 순회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정당의 공천 없이 치러지는 특별 시교육감은 강숙영·김대중·이정선·장관호 후

보가 4파전으로 맞붙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광산을 국회의원 보선에는 민주당 임영, 국민의힘 안태욱, 진보당 전주연,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구본기 후보가 막판까지 사력을 다했다.

곳곳에서 이른 새벽 출퇴근길 및 거리 인사, 전통시장 방문, 합동 유세 등을 벌이며 저마다 지역 발전과 비전을 앞세워 세물이에 집중했다. 일부에선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에 치중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핵심 거점 유로로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혀왔다. 대전의 한화에너지로스페이를 폭발사고 애도 분위기에 따라 조용한 현장 행보로 종료됐지만 선거운동 내내 불꽃튀는 승부였다.

드디어 선택의 날이 밝았다. 투표해야 한다. 절대로 한 표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아주 미미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어서다. 유권자의 일상도 당선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에 질려버렸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년들이 적극 나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권리다. 의무다.

확실한 보상체계 확립 공익신고법 실효성 높여야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담합과 자본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식품·안전 위반 등 갖가지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가 공익신고다. 특성상 은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자 신고가 결정적 단서가 되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으로 신분 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함에도 관련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포상금제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대급 통합적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개별화된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라는 아동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느린학습자 아동을 위한 지원은 한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래 관계 형성, 감정 조절, 일상생활 기술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돼 일관된 지원을 제공할 때, 아이들은 혼란이 아닌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아동들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된다.

국민신문고와 시범서비스 등을 제시하면서 부패와 공익침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적극 처리하고, 보호·보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 처리 건수는 1만8천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고, 보호는 1천195건으로 154.3% 급증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토대 구축에 대체로 공감한다. 비밀 보장 등의 사항도 촘촘히 정비돼야 하겠다. 조의원의 언급처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적인 지원 제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임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의 신고자에게 최고 금액인 20억원(기존 12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당연히 '로또' 정도의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뻔히 알면서도 쉬쉬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제재금을 포상금으로 활용하면 얼마든 가능하다.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

현장칼럼



최강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장

누구나 같은 속도로 배우지는 않는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저마다 다르다. 그 중에는 또래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익히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마주해야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아동들이 있다. 배우는 속도가 조금 다를 뿐, 이런 아동들도 분명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이라고 부르는 아동들이 바로 그렇다. 국내 아동·청소년 인구의 약 13~14%에 해당할 만큼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아동들의 어려움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오랫동안 '노력이 부족한 아이', '의지가 없는 아이'로 오해받으며 지나쳐왔다. 하지만 이는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는 특성의 차이다. 이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질책이 아니라, 그들을 알아보고 함께 맞춰가는 조금 다른 지원이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 아동이란 정확히 어떤 아동을 말하는 것일까?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낮지만, 지적장애

조금 다른 배움,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주에 속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5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설명되며, 인지적 처리 속도, 언어 이해,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영역에서 또래보다 일정한 제한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학습 상황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반복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발달적 특성의 차이로 이해돼야 한다.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학습뿐 아니라 또래 관계와 정서적 영역에서도 어려움이 누적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르게 따라오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배움'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지원이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이해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반복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세분화하고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때, 아동은 학습을 넘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며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광주시내 4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느린학습자를 지도하는 과전전문가를 배치해 아동 개별 특성에 기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에는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사회적 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개별화된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라는 아동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느린학습자 아동을 위한 지원은 한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래 관계 형성, 감정 조절, 일상생활 기술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돼 일관된 지원을 제공할 때, 아이들은 혼란이 아닌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아동들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분리된 지원'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배움을 존중하는 환경'이며, 느린학습자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이해와 기다림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때, 아동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다른 배움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뒤처진 존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독자투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촌 지역 도로 곳곳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영농철에는 농민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동시에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은 시기이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 운전자가 많고 농기계의 특수한 구조와 도로 환경이 맞물리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최고속도가 낮고 방향지시등이나 제동등 안전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새벽이나 해질 무렵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뒤따르던 차량이 농기계를 미처 발견치 못해 추돌

본격 영농철, 농촌지역 교통사고 주의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농촌지역 도로는 폭이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중앙선 침범이나 교행중 사고 위험도 배나 높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교통사고는 단순 접촉 사고에 그치지 않고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안전벨트나 보호장비 착용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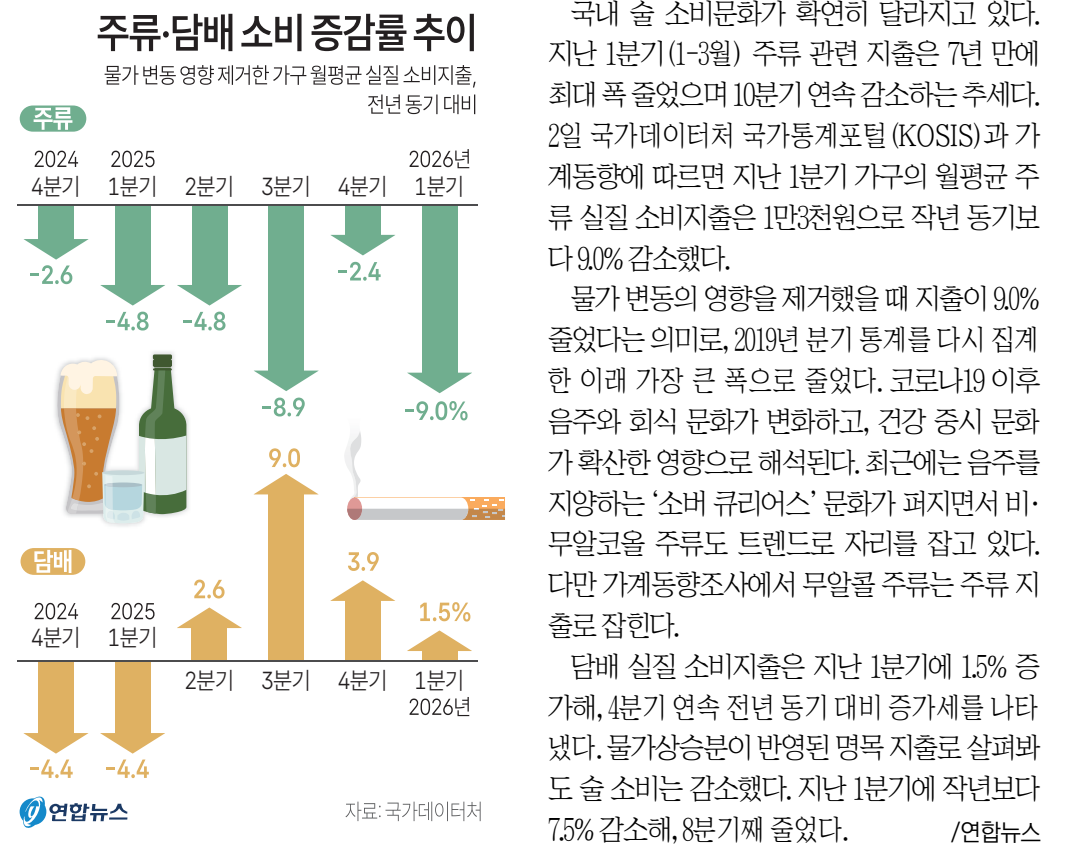
영농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배려와 안전의식이 절실

하다. 일반 운전자들은 농기계를 발견하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무리한 추월을 자제해야 한다. 농기계 운전자들 역시 야간 반사판 부착, 등화 장치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농민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영농철, 안전 또한 함께 수확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